국민의당 '통합 갈등' 분수령 될 듯

安, '의견수렴' 마치고 내주께 유승민 회동 vs 통합 반대파, "의원총회 소집을"… '손학규 역할론' 대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 전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밝은 분위기의 수보회의

지난 10월부터 두달 여를 끌어온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 통합 갈등'이 18일 분수령을 맞고 있다. 안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함께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광주 동반 방문을 검토하며 통합론 정면돌파를 시사하고 있다. 반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라 양측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대표 측은 '의견 수렴'이라는 명칭 하에 이어온 전국 시도당별 당원간담회를 이번주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론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 상황도 조만간 정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 소속 의원들을 1대 1로 만나온 안 대표 측은 특히 상대적으로 반대 여론이 우세한 현역 의원들과 자신에게 우호적인 원외위원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통합론을 설득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안 대표는 아울러 오는 21일엔 통합을 전제로 진행돼온 '국민통합포럼' 광주 행사에 유 대표와 동반 참석을 검토 중이다. 호남 중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통합 반대' 여론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당 내부 상황을 정리한 뒤 내주께 유 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다. 통합 포럼 등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1대1 회동 형식으로, 이는 사실상 '통합 선언'을 위한 막바지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남 중진 중심의 통합 반대파의 반발 목소리도 만만찮다. 통합 반대파인 정동영·조배숙·유성엽·장병완·장정숙 의원과 호남계인 박준영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긴급조찬모임을 갖고 안 대표가 통합 추진을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모았다.

조 의원은 "저희는 안 대표와 유 대표의 '바른정당 합당'을 보수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절대로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아울러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정식 요구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통합 반대 여론이 우세한 만큼 이를 통해 안 대표의 통합 동력을 꺾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일촉즉발로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귀국하는 손학규 고문의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다. 손 고문은 대선을 앞두고 바른정당과의 후보단일화를 거론한 만큼 바른정당 통합론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게 안 대표 측 시각이다.

반면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안 대표 거취에 초점을 두고 "안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손 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훌륭한 대안"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결론적으로 손 고문이 안 대표에 대한 반대파의 반감을 잠재우면서 통합론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절충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김춘진, 한국경제문화 대상 정치지도자 부문 수상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사진)은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경제문화대상' 정치지도자 부문을 수상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더욱 탄탄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신문이 주최하는 국내 좋은 기업 선정위원장을 맡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확대 발전시키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 500원 민생택시 확대추진을 비롯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골목상권 대변인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원장 송병호)이 주최한 '한국경제문화대상'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발굴,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지식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분야별로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김진성 기자

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22일 선고

대법원이 오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지 아니면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할 지 주목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당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아닌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靑 "임종석, 협력 강화차 UAE 간 것"

청와대는 1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전 사업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갔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각의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 언론 보도 관련 출입기자단에 이같이 입장을 말하며 "UAE가 '항의를 목적으로 방한 계획이 있다'는 내용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같은 의혹 제기를 보도한)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임 실장과 UAE 왕세제 접견 시 원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원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칼둔은 원자력이사회 의장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지난 9~12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했다. /뉴시스

조배숙, 자녀교육·가족돌봄휴가 법안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근로기준법 일부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도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이 유급휴가인 자녀교육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직장인들의 가족돌봄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교육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연차 유급휴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장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3건 법안의 발의를 통하여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음 놓고 아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나라, 국민 모두가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